

민법(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)

1.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-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.
 - ② 사실인 관습은 법원(法源)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 - ③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④ 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, 증명하여야 하고,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.
 - ⑤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.

2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-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 - ②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 -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,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 - ④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.
 - ⑤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,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.

3.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- ①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.
 - ②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 - ④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 - ⑤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,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,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4. 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,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ㄴ.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.
- ㄷ.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ㄹ.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,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- ① ㄹ
- ② ㄱ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
- ⑤ ㄱ, ㄴ, ㄷ, ㄹ

5.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② 질병, 장애,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.
-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.
- ⑤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,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.

6.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.
- ②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登記하면 효력이 있다.
- ④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
- 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
7.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
- ②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
- ③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
-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
- ⑤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

8.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.
- ②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.
- ③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,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④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,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-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
9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.
- ②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③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.
- ④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10.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률행위인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의 주요한 발현 형식이다.
- ②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.
- ③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.
- ④ 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.
- 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
15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,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면, 부작위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.
- ④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,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.
- ⑤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.

16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.
-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.
- ③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.
- ④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.
- ⑤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.

17.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,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-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,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.
-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,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-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,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.
-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,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.

22.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.
-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- ③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.
- ④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.
- ⑤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.

23.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?

- ①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
- ②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
-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
- ④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
-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

24.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.
-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.
-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.

25.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,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.
-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.
-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
행정법

26.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. ()에 들어갈 용어는?

()의 원칙 :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신뢰보호 ② 평등 ③ 부당결부금지 ④ 명확성 ⑤ 법률유보

27.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행정작용은 (가)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,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(가)에 근거하여야 한다.
-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(나)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(나)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(나)등에 따른다.

- ① 가: 헌법, 나: 법률 ② 가: 헌법, 나: 법령 ③ 가: 법률, 나: 법률
④ 가: 법률, 나: 법령 ⑤ 가: 법령, 나: 법령

28.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·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.
- ②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·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.
-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,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.
- ⑤ 구) 「도시계획법」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.

29.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.
- ②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30.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,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.
-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.

31.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.
- ②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,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.
- ④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.
- ⑤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.

32.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구) 「출입국관리법」상 체류자격변경허가
- ㄴ. 구)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
- ㄷ. 구)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상 공유수면 점용허가
- ㄹ. 구) 「국유재산법」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ㄷ, ㄹ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33.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.
-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「국가배상법」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·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-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4.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③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
- ④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
- ⑤ 인원·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
3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. ()에 알맞은 숫자는?

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(가)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(나)일이 경과한 날부터 (다)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(라)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① 가: 7, 나: 10, 다: 20 ② 가: 10, 나: 20, 다: 10 ③ 가: 10, 나: 20, 다: 30
- ④ 가: 20, 나: 30, 다: 7 ⑤ 가: 20, 나: 30, 다: 10

36.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②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·운영하는 경우
-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·운영하는 경우
- ④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⑤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, 성별,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

37.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.
-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「국세징수법」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⑤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
38.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인의 출입국·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5절(행정상 강제)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,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④ 의무 불이행의 동기,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.
- 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게고 하여야 한다.

39.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- ②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·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.
- ③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.
-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40.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.
- ② 「행정심판법」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③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- ④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44.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·동의·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 ②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.
-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.

45.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.
- ③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,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④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46.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-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- ⑤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행정학개론(지방자치행정 포함)

51.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.
-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
-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.
- ④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한다.
-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면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.

52. 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문제에 대한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(art)
- ② 행정현상의 인과관계 지식화를 강조하는 과학성
- ③ 실용학문으로서의 전문직업성
- ④ 다양한 학문분야의 영향을 받은 종합학문성
- 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의존성

53.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990년대의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.
- ② 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이다.
- ③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로,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④ 시장성 테스트는 내부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.
- ⑤ 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변화 속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.

58. 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다.
- ② 이해충돌 회피의 기본원칙은 “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”는 것이다.
- ③ 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-대리인 관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
- ④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.
- 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.

59.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,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.

60.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.
-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.
-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.
- ④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들다.
- ⑤ 전년대비 5%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.

61.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.
- ②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.
-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- ⑤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.

62.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- ㄴ.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ㄷ.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ㄹ.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
63. 다음은 채용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?

(ㄱ)는 시험성적이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관련한 것으로,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실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. 반면 (ㄴ)는 측정 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,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집단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해 그 성적을 비교하는 (ㄷ)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.

- ① ㄱ: 기준타당도, ㄴ: 내용타당도, ㄷ: 재시험법
- ② ㄱ: 기준타당도, ㄴ: 신뢰도, ㄷ: 재시험법
- ③ ㄱ: 내용타당도, ㄴ: 신뢰도, ㄷ: 재시험법
- ④ ㄱ: 내용타당도, ㄴ: 기준타당도, ㄷ: 반분법
- ⑤ ㄱ: 신뢰도, ㄴ: 내용타당도, ㄷ: 반분법

64.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직에 있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이다.
- ②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.
- ③ 직무분석 단계는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해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.
- ④ 직무평가 단계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직급과 등급을 형성하는 작업이다.
- 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하다.

69.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엘리슨(Allison)의 조직과정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.
-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.
- ③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.
- ④ 만족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.
- ⑤ 혼합주사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한다.

70.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.
- ②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한다.
- ③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.
- ④ 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,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.
- ⑤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·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.

71. 콕과 엘더(Cobb & Elder)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

㉠. 사회적 쟁점	㉡. 사회문제
㉢. 공중의제(public agenda)	㉣. 제도의제(institutional agenda)

- ① ㉠ - ㉡ - ㉣ - ㉢
- ② ㉡ - ㉠ - ㉢ - ㉣
- ③ ㉡ - ㉢ - ㉠ - ㉣
- ④ ㉢ - ㉡ - ㉠ - ㉣
- ⑤ ㉣ - ㉠ - ㉡ - ㉢

72.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.
- ②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.
- ③ 일선관료의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.
- ④ 바람직한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.
- ⑤ 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다.

73.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- ②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
-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
- ④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
- 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
74.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-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·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
75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 ② 사업소
- ③ 합의제 행정기관 ④ 자문기관
- ⑤ 출장소